내 삶이 바뀌는 전남행복시대

4월 19일 월요일	보 도 자 료	생명의 땅 으뜸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실과	친환경농업과	과장	이 정 희	팀장	마 성 간	☎	286-6330

전남도, 올해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대폭 강화로 신뢰 구축 추진

- 정부의 잔류농약 분석성분 320종에서 511종으로 확대에 적극 대응 -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정부가 잔류농약 분석 성분을 320종에서 511종으로 확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공동방제 사전 신고제, 인증취소 농가 지원제한 등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밝혔다.

이는 그동안 추진한 다양한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리 대책과 강력한 보조금 회수 조치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증포기와 일부 농가 생산물에서 잔류농약 검출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올해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리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 사전 신고제」를 운영한다. 공동방제를 위탁받은 사업자는 공동방제 날짜, 유기농업자재와 사용량 등이 포함된 공동방제 확인서를 방제 전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친환경 농업단지 대표는 공동방제 현장에 입회하여 사용되는 자재가 유기농업자재가 맞는지, 합성농약 등 금지물질을 혼합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시·군은 합성농약 등 금지물질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농가 입회하에 수시로 시료를 채취 검사하는 등 현장 관리를 강화한다.

작년까지 320종이던 잔류농약 분석 성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개정으로 올해 10월부터는 511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전라남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분석 성분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작년 잔류농약 분석성분을 511종으로 늘려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87농가가 이를 위반하여 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필요성도 제기된 바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취소 농가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인증취소 농가는 보조금 회수와 함께, 1회 인증 취소 시 3년간, 2회 취소 시 5년간 친환경농업 관련 도비 보조사업 지원을 제한한다.

공동방제 위탁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동방제 시 금지물질을 혼용하여 사용한 경우 친환경농업분야 사업 참여를 영구 제한한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인증취소 농가와 원인제공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소영호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일부 농가와 공동방제 사업자의 일탈로 친환경농업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다수 농업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2020년 전라남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45천 928㏊로 전국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유기농 면적도 23천 770㏊로 전국의 61%이다. 특히 유기농 면적은 전라남도 전체 인증면적의 51.7%로 무농약 면적을 추월하여 역대 최대면적을 갱신했다.